

특혜 분양 대상자가 김문수 지사 후원



<앵커 멘트>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차 중복 분양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지난 5.31 지방선거 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후원을 했다거나 유령 회사가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공급지침에 어긋나게 1차와 2차에 걸쳐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16,000여 평을 분양받은 한 벤처회삽니다.

이 회사의 대표 양 모 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3백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지만 진대제 후보에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 드렸어요."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 측은 후원금을 받았을 당시엔 분양에 참여한 업체인지 몰랐으며 소액 단위의 후원자라 곧바로 영수증 처리를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1차 분양 때 8천여 평을 분양받은 한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의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녹취> 빌딩 관계자 : "한번도 못봤는데 저 사람들, (벤처회사 입주했다고 하던데)잘 모르겠어요. 전 한번도 못봤어요."

회사 측은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 부지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해산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의 심사를 거뜰히 통과했습니다.

심사 자료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 : "이와 관련된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앞으로 건교위 감사나 검찰수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업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사회] 김상협 기자

입력시간 : 2006.10.19 (07:52)

[↑ 위로](#) [☒ 창닫기](#)

Copyright©2005 KBS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 webmaster